

법령 제·개정 동향

정보통신공사업법(예정)

[시행 2026.10.22.] [법률 제21555호, 2026.4.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공공부문의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제8조(감리 등) ① ~ ⑧ (생략)	제8조(감리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에 관한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의3(공사업의 교육)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교육 이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한다)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4. 6.] [국토교통부 제2026-168호, 2026. 4. 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현행 A형 자율주행자동차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임시운행허가 간소화 절차를 조향핸들 및 가속·제동페달이 없는 B형 자율주행자동차와 시험운전자·탑승자가 승차할 수 없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A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A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변경(안 제6조제4항)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p>제6조(시험품 및 관련 자료 제출)</p> <p>① ~ ③ (생략)</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A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8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운행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1. A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20대 이상인 자 중 신규허가 실적이 10대 이상인 자</p> <p>2. ~ 6. (생략)</p>	<p>제6조(시험품 및 관련 자료 제출)</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8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운행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1.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20대 이상인 자 중 신규허가 실적이 10대 이상인 자</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22조(재검토키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2조(재검토키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국내외 ITS 월간토픽

2026년 4월은 자율주행, AI, C-ITS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이 제도 정비와 산업 협력, 현장 실증으로 동시에 이어지며 교통체계 전환의 방향이 한층 구체화된 한 달이었다. 스마트 신호 운영, AI 단속 장비 도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ITS 적용이 확대되면서 기술이 실제 교통 운영과 안전 정책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내 토픽

국가 인공지능 혁신의 마중물, 국가 인공지능 사업 52개 과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인공지능 사업 52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정부가 확보한 첨단 GPU 1만 장 가운데 약 3000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는 자율주행,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AI 스타트업 상용화, 기상·기후 예측, 의료, 콘텐츠, 북극항로 예측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4월부터 과제 일정에 맞춰 GPU를 순차 배분하고, 유휴 자원은 산·학·연 단기 수요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6.4.1.)

제주 서광로 BRT, AI 교통시스템 도입 후 '정체 완화' 효과

제주 서광로 BRT 구간은 섬식정류장 도입 이후 차선 축소로 혼잡이 우려됐지만, 제주자치경찰단이 AI 기반 스마트교차로와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정체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 광양사거리부터 도령모루까지 3.1km 구간에 3월 20일부터 개선 신호를 적용한 뒤, 혼잡 시간대 평균속도는 18.3km/h에서 22.6km/h로 높아지고 지체시간은 2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를 바탕으로 다른 주요 구간에도 AI 기반 신호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2026.4.1.)

경기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전국 표준으로 확산되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인천시와의 연계를 계기로 전국 표준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이동 경로에 맞춰 교통신호를 자동 제어받아 교차로를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돼 행정구역을 넘을 때 우선신호가 끊기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도에서 인천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에도 이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며, 지난 3년간 시군 간 운영 데이터에서는 긴급차량 출동시간이 평균 13분 12초에서 5분 5초로 61.3%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투데이, 2026.4.6.)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정부는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시키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미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우선 피해자를 보상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는 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연말까지 사고유형 분류, 책임 판단 기준, 보험처리 및 보상 절차 표준화를 추진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실증도시 보험 운영 점검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4.7.)

'한국 C-ITS 산업협의체' 출범 "미래 교통 생태계 건인"

한국 C-ITS 산업협의체가 2026년 4월 공식 출범하면서,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교통안전 인프라와 자율주행 기반 확산을 위한 민간 주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LG전자, 아우토크립트, 에티포스 등 15개 기업·기관이 참여한 이번 협의체는 C-ITS와 V2X를 중심으로 정책·제도 연구, 지자체 실증사업 지원, 기술 상호운용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C-ITS가 단순한 통신기술을 넘어 교통사고 저감과 미래 교통 운영 효율화, 자율주행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산업계가 정책과 기술, 실증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해 생태계 확산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향후 협의체가 실증사업과 제도 개선 논의에서 어떤 조정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국내 C-ITS 산업의 성장 기반도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디넷코리아, 2026.4.9.)

용인시, 도로시설물 안전 정보 공개 확대...주요 교차로 LED 보행신호등 설치

용인특례시는 도로시설물 안전 정보 공개와 보행자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표시제를 시행하고 주요 교차로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했다. 시는 보도육교 54곳과 보강토 옹벽 10곳 등 총 64개 시설물에 안전 정보 표시판을 설치해 최근 정기 점검 결과와 QR코드 기반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신고 절차도 연계했다. 이와 함께 수지구 주요 교차로 4곳에는 신호 변화와 연동되는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도입해 보행자가 신호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도로시설물 관리 정보 공개와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지속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스커버리뉴스, 2026.4.14.)

택시 플랫폼·국회의 '데이터' 줄다리기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송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와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플랫폼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 정책 수립과 산업 자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와 택시 업계는 호출·배차 데이터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수수료 개편 검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카카오톡·비전어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는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MS)으로도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추가 제출 요구는 영업비밀 침해와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블로터앤미디어, 2026.4.15.)

쏘카 “22만건 사고 데이터로 자율주행 승부”

쏘카는 자율주행 전담 조직 '미래이동TF' 성과를 공개하며 자율주행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전국 2만5000대 커넥티드카가 하루 110만km를 주행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익명화·타임싱크·비전어모빌리티 기반 라벨링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전환하고, 22만건의 사고 데이터는 돌발 상황 대응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쏘카는 향후 3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플랫폼·데이터·차량 운영을 아우르는 수직 통합형 자율주행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아일보, 2026.4.16.)

핀텔, AI 기반 '다가능 무인교통 단속장비' 경찰청 혁신제품 최종 선정

핀텔의 AI 기반 다가능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2026년 제1차 경찰청 혁신제품 선정평가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 장비는 단일 카메라와 AI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통합 단속 솔루션이다. 핀텔은 경량화된 단일 구조를 통해 설치 비용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으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 시범운영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성능평가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2026년 내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우선 설치하고, 2027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핀텔 보도자료, 2026.4.16.)

2025년도 교통사고 통계자료 발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5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는 19만3889건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했고 부상자도 27만1751명으로 2.4% 줄었지만, 사망자는 2549명으로 1.1% 증가했다. 경찰은 고령인구와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고와 사망자가 각각 8.3%, 10.8%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보행자 사고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소폭 증가했고, 이륜차 사고도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늘었다. 반면 화물차, 음주운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와 고령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노인 대상 찾아가는 교육과 안전용품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보도자료, 2026.4.17.)

해외 토픽

ITS America, 교통 기술 청사진 발표

미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America)는 교통과 인프라의 안전성, 연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기술 청사진을 발표했다. 문서는 연방정부가 디지털 인프라에 우선 투자해 도로 안전과 이동 효율, 시스템 회복력,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ITS America는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 중심 인식을 넘어 기술을 핵심 인프라의 일부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사진에는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 V2X 및 커넥티드 인프라, 자율주행차, 신기술, 회복력, 일자리와 인력 양성 등 7개 핵심 분야가 담겼다. (ITS America, 2026.4.16.)

베트남, 드론과 인공지능 카메라 기반 불법 주차 단속 시행

하노이시 경찰은 2026년 4월 20일 교통경찰 7팀과 지방경찰이 함께 응우옌짜이 거리 일대에서 불법 주차차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직접 순찰과 함께 드론, AI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위반 차량을 신속히 적발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노이 교통관제센터에서는 1837대의 AI 카메라를 통해 시내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총 10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7600만 동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하노이시 경찰은 이번 조치가 도시 질서 확립과 교통 혼잡 해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 보도자료, 2026.4.20.)

웨이모 자율주행, 도시 전체 안전 개선 실패 논란...개별 차량 안전성만으로는 부족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은 개별 차량 기준에서는 사고 위험이 낮았지만, 실제 도시에서는 교통사고 부상자와 보행자 사망자가 줄지 않아 전체 교통 안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에서는 사고나 보행자 사망이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는 자율주행이 교통량 증가 등 도시 요인과 맞물려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도입 시 교통 시스템 전반을 고려한 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티인사이트, 2026.4.22.)

ITS 유럽 총회, 이스탄불에서 개막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7회 ITS 유럽 총회에서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이 시범사업을 넘어 실제 대규모 적용 단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데이터, 인공지능, 커넥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이미 진행 중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거버넌스와 정책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속도 제한, 도로 공사, 위험 정보 등의 데이터 디지털화와 공유, 자율주행 실증 확대, 통합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안전·포용적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ITS 발전은 모든 시민을 위한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TTI, 2026.4.27.)

공공조달 발주동향

본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으로, 특정 검색어(ITS, BIS, 교통정보, 첨단교통 등)로 검색된 발주정보('26.4.30. 기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검색일 이후 등록되었거나 미리 설정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일반용역	2026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연구운영관리 용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278,890,923	2026. 05. 11.
공사	2026년 서울청 국도ITS 구축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526,110,000	2026. 05. 12.
물품	2026년 AI 기반 지역맞춤형 도로교통 위험환경 개선을 위한 Edge형 현장 시스템 제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0,950,190	2026. 05. 11.
일반용역	2026년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한국교통안전공단	2,468,780,000	2026. 05. 20.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용역	SI기반 ITS 원격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본사	396,955,084	2026. 05. 14.

2026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연구운영관리 용역

일반사항

- ◎ 사업명 : 2026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연구운영관리 용역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까지
- ◎ 사업예산 : 278,890,923원 (부가세 포함)
-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배경

- ◎ 그간 전국 17개 시도 55곳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실증환경을 조성하였으나 美·中 대비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은 열세인 상황
- ◎ 美는 빅테크, 中은 국가 주도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면서 레벨4(무인) 로보택시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격차 가속화
- ◎ 지역별 소규모 실증을 진행하면서 절대적인 데이터량이 부족하고, 기업별로 수집한 데이터가 표준화 되지 않아 데이터 공유 어려움
- ◎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으로 대규모 데이터 수집, 인프라 지원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E2E 기반 AI 전환의 가속화 필요

주요 과업 내용

- ◎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 운영관리 체계 구축 및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
- ◎ 실증 운영 사업자(차량 제작·개조 등) 마일스톤 및 진도율 관리
- ◎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 ◎ 국비·민간 매칭 사업비 집행 점검 및 전문 회계 정산 실시
- ◎ 자율주행 실증 관련 법률 자문 및 안전지침 개발

문의처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실증처 (031-369-0425)

2026년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일반사항

- 사업명 : 2026년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7. 04. 30.(장기계속계약)
- 사업예산 : 2,468,780,000원(부가세포함)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 목적

-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BIS 통합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인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의 정보통신장비 및 상용-응용 S/W, 버스안내단말기(BIT), 차량단말기, 자동승객계수장치, 행선지안내기 등의 관리
- BIS 통합센터 운영시스템 및 각 지자체별 현장장비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정비 등 효과적인 사전점검과 적정 성능유지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제를 구축
- 우수한 기술 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전문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대민 서비스 업무지원 체제 확립
- 버스정보시스템(BIS)의 기능 개선 및 기술, 인력지원, 최적의 시스템 운용관리 방안 제시로 시스템 효율성 확보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한국교통안전공단 BIS통합센터, 위탁운영 지자체별 운수회사 차고지, 위탁운영 지자체별 버스노선 및 경유 정류소 전체(51개 지역)
- 내용적 범위 : 통합센터시스템, 현장시스템 유지보수, 버스정보시스템(BIS) DB 관리 및 응용 S/W 기능 개선 등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연구처 (054-459-7432)

AI기반 ITS 원격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일반사항

- ◎ 사업명 : AI기반 ITS 원격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월 20일까지
- ◎ 사업예산 : 금396,955,084원
-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배경

- ◎ 「AI기반 ITS 원격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
- ◎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감리대상 사업

- ◎ 사업명 : AI기반 ITS 원격유지관리시스템 구축
- ◎ 사업자 : 에스트래픽(주) 컨소시엄
- ◎ 사업기간 : '26. 1 ~ '27. 1 (착수일로부터 380일)
- ◎ 계약금액 : 금 3,736백만원(부가세포함)

과업 범위

- ◎ 감리 대상사업의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단계) 감리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단계별 점검
- ◎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

문의처

- ◎ 한국도로공사 ITS처 ITS계획부 (054-811-3619)

ITSK NEWS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국방외교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허청회, 이하 'ITS Korea')는 2026년 4월 14일(화) ITS Korea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국방외교협회와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과 국방·외교·안보 분야 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방·ITS 융합 기술 활용 ▲해외사업 및 국제 프로젝트 공동 참여 ▲정책 및 전략 과제 발굴 ▲교육 및 인력 교류 등이다.

양 기관은 ITS 기반 스마트 인프라, 통합관제, 데이터 플랫폼 기술의 국방·안보 및 재난 대응 분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무인체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허청회 ITS Korea 회장은 “이번 협약은 국방·안보와 첨단 교통기술을 연계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스마트 인프라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군 겸용 기술을 기반으로 방산 분야와의 접점을 넓혀 국내 ITS 기술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민간 간 소통의 장 마련...
2026 ITS 정책·사업 설명회 성료



국도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허청회, 이하 'ITS Korea')가 주관하는 「2026 ITS 정책·사업 설명회」가 2026년 4월 17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정책과 사업계획을 민간과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국도교통부 홍복의 디지털도로팀장과 ITS Korea 허청회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도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산업계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추진 공공기관에서 올해 사업방향과 일정을 공유하였고, 관심 있는 기업의 의견을 정부와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가 국도 및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의 추진 방향과 위탁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교통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가 교통량조사 사업의 추진계획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로대장 디지털 전환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교통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과 활용 기반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ITS Korea는 ITS 표준화 추진 방안 및 회원사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ITS 기술기준 정비와 정보연계 표준화 방향, 기술 멘토링·전문교육 등 산업계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방향을 공유하였다.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는 총회 준비 현황과 글로벌 홍보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ITS 정책과 사업이 단절 없이 지속적·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일관된 방향 제시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국도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와 같은 자리가 앞으로도 정례화되기를 바란다는 뜻과 함께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ITS Korea 허청회 회장은 "ITS는 교통 인프라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끄는 핵심 분야"라며,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고, 현장의 수요가 정책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협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